

건설업계 '일감 보릿고개' 허덕

내우외환 강원산업 (1)반토막난 수주액

최근 20여년간 강원 경제를 이끌어 온 산업들이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6대 주력산업(건설, 음식·숙박, 문화·서비스, 음식료품, 비금속광물제품, 자동차부품)과 3대 전략산업(신소재·의료기기·바이오)의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장 한계'에 다다른 징후가 감지됐다. 도내에 본사를 두고 6년 연속(2010~2015년) 사업을 이어온 기업 가운데 9개 업종 3,201개 기업의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가 활용됐다. 3회에 걸쳐 강원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본다.

지난 5년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건설업이 흔들리고 있다. 평창올림픽 SOC 공사가 마무리되고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급격한 수주난에 직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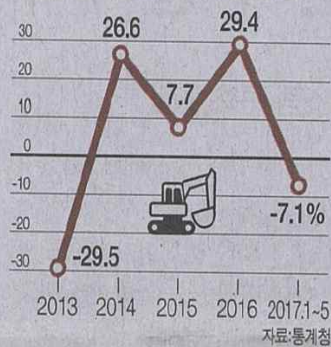
한은 강원본부에 따르면 도내 건설 발주액은 2014년부터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수주 증가율이 29.4%에 달했지만 올 상반기 -7.1%로 급감했다. 지난해 5조원을 웃돌았던 수주액도 올 들어 2조원 미만으로 반토막 났다.

더 큰 문제는 향후 3년간 먹거리

**올림픽 SOC 공사 마무리
상반기 수주증가율 -7.1%
이자도 못내는 업체 229곳**

리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원주~강릉고속철도 등이 올해 대부분 마무리되고, 서울~속초 고속화철도는 2020년 이후에나 착공될 전망이다. 그나마 호조세였던 민간 주택건설경기도 내년부터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강원지역 건설 수주 증가율



규제가 더해져 악화될 전망이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를 5년 단위로 나눠 도내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을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감소한 반면 건설업만 증가했다. 강원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던 축이 흔들리기 시작한 셈이다. 특수를 노린 신규 업체들이 난립하며 건설업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하림기자

2면에 계속

내우외환의 강원산업 - 1면에서 계속

업계 관계자는 “원주, 강릉, 평창과 발전소 건설이 있었던 삼척의 레미콘 업체 수는 3년 새 배로 늘었는데, 공사가 끝나 가면서 시장이 줄어 가동률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라고 했다.

특히 “매출액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운영자금이 부족하면 시중은행 대출로 충당하는 곳도 많다”고 밝혔다.

실제 재무구조가 부실해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도내 한계 기업 수는 2015년 기준 341개로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29개(67.2%)로 가장 많았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구조조정이 완만히 진행되도록 관련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